

오늘의 주요기사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江原日報	14면	67년전 쌀 500가마 나눠준 파출소장 아시나요	1
강원도민일보	23면	태백 황지연못 '장규익 선덕비' 관광자원화 돌입	2
江原日報	21면	“ 환자 건강정보 맞춤 활용 진료서비스 수준 향상 기...	3
강원도민일보	22면	흩어진 검사기록 한눈에...원주서 '의료데이터 댐' ...	4
에너지경제		김기홍 강원도의원, 미래 진료 체계의 단초 ‘ 진료 ...	5
KBS 춘천		‘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 지원 ’ 시작...원주 시범운...	6
KBS 춘천		‘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 지원 ’ 시작...원주 시범운...	7
강원도민일보	01면	레고랜드 쇼크 책임 공방, 여야 갈등 최고조	8
강원도민일보	03면	민주 "고의부도" 도 책임론 vs 국힘 "잘못된 선동" ...	9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보증채무 2050억원 심의 '결과 주목'	10
江原日報	01면	'레고랜드 사태' 놓고 여야 책임공방 격화	11
江原日報	02면	채무보증 당시 도의회 동의 안받아 ... '적법성' 뇌...	12
江原日報	03면	與 "김 지사에 책임 전가"	13
江原日報	03면	野 "강원도發 고의부도"	14
江原日報	10면	제2호 반다비 체육센터 신북읍에 건립	15
江原日報	11면	둔내면 두원1리 경로회관 준공식	16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강정호 강원도의원(속초)	16
강원도민일보	13면	산악관광 · 농업 6차산업화 방안 모색	17
아시아뉴스통신		2022 태백시새마을회 우수마을공동체 경진대회 개...	18
강원도민일보	09면	강촌 · 가평 관광특구 광역단체 심의서 발목	19
강원도민일보	22면	"강릉에 강원역사문화진흥원 설립 도 차원 추진 필...	20
江原日報	10면	도청 신청사 유치 지역간 경쟁 심화	21
江原日報	01면	기존 집 안 팔리고 ... 세입자 못 구하고 ... 잔금대...	22
G1방송		환경오염 · 악취발생 등 축산악취 민원 증가	23
국제뉴스		김진태 강원도지사, 아동폭력없는 세상을 만들어요...	24
강원도민일보	18면	[요즘에] 부채축소 노력을 정치희생양 아닌 문제해...	2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내년 예산안 복합적 위기 대응 누수없어야	26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전통시장 화재 피해 최소화하려면	27
江原日報	20면	학대와 방치 ... 고통받는 아동 다시 증가	28

江原日報

2022년 11월 15일 (화)

지역 14면

67년전 쌀 500가마 나눠준 파출소장 아시나요

황지연못 장규익경사 선덕비
태백시 내년 정비사업 추진

태백시가 황지연못 안에 세워져 있는 선덕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낙동강 발원지로 알려진 황지연못에는 황부자 전설 외에도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의 덕행을 기념하는 선덕비가 설치돼 있다.

6·25전쟁 후 당시 황지파출소장이던 장규익 경사는

생활고에 허덕이던 황지지역 1,500가구 5,000여명의 주민을 위해 본가인 강릉에서 쌀 500가마니를 옮겨 와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이를 기리기 위해 주민들은 1955년 9월 황지연못 상지 인근에 폭 37cm, 높이 88cm, 두께 12cm의 장규익 선덕비를 세웠다.

선덕비는 60여년의 세월의 무게로 노후화됐고, 선덕비 추가 건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과거 강릉시와 태백

시의 협력과 교류의 증거이자 화합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선덕비 정비사업을 강릉 출신인 권혁열 강원도의장과 태백 출신 문관현 도의원의 각별한 관심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3월 노후화된 장규익 선덕비의 반석 설치와 주변 정리 등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 향토 문화자원이 사장되지 않고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태백=김광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15일 (화)

인물 23면

태백 황지연못 '장규익 선덕비' 관광자원화 돌입

60여년전 지역주민 직접 건립
시, 선행 홍보 등 정비사업 추진

“황지연못 안에 세워진 장규익 선덕비 (사진)에 대해 아시나요?”

태백시는 지역사회에 베푼 덕행을 기념해 황지연못에 설치돼 있던 ‘장규익 선덕비’를 정비해 장규익 선생의 선행을 알리고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장규익 선덕비는 6·25전쟁 후 생활고에 허덕이던 황지 지역 주민들 (1500가구 5000여명)을 위해 당시 황지 파출소장이던 장규익 경사가 본가 인강릉에서 쌀 500가마니를 가져와 주민들에게 나누어준 선행을 기리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것이다.

선덕비는 지난 1955년 9월 폭 37cm, 높이 88cm, 두께 12cm로 황지연못 상지에 설치했으나 60여년의 세월이 지나며 노후되고 설치 의미도 잊혀져 감에 따라 선덕비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은 강릉 출신인 권혁열 강원도의장과 태백 문관현 도의원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그동안 제기된 민원사항을 잘 헤아려 빈민구휼에 적극 앞장선 장규익 경사의 공을 기리고 그의 홍은과 청렴성이 후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향토 문화자원이 사장되지 않고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의호



“환자 건강정보 맞춤 활용 진료서비스 수준 향상 기대”

“소중한 건강 정보가 담긴 빅데이터로 응급 위기 상황에 보다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14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지원 플랫폼’ 출범식이 열렸다.

백순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은 “이번에 시작하는 진료지원 플랫폼은 응급 상황 대비는 물론, 불필요한 진료를 줄여 환자 중심의 진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전국 최초로 제공되는 진료지원 플랫폼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 공모사업’에 선정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주도해 1년여에 걸쳐 구축됐다. 도와 원주시, 국민건강보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주도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출범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의료지원 플랫폼 개발사업 출범식이 14일 원주 인터불고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다. 원주=허남윤기자

공단, 도경제진흥원,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 사업은 2024년까지 87억원을 투입해 완성도를 높인다. 건보공단 앱을 통해 과거 진료기록이나 건강검진 내역 등

환자의 정보를 통합·연계, 병원 진료 시 개인의 맞춤형 진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원주에서 시작하는 건보 기반 진료지원 플랫폼이

강원도를 넘어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 연계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과 최미옥 원주시의회 부의장,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종복 원주시의사회장, 문상덕 원주시약사회장 등도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건보공단은 원주에서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내년 춘천과 평창, 정선 등을 거쳐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 김 지사는 의료지원 플랫폼에 참여하는 시의사회와 약사회에 협력 병원·약국 현판을 전달했다. 원주=허남윤기자 paulhur@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15일 (화)

인물 22면

흘어진 검사기록 한눈에... 원주서 '의료데이터 댐' 열린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출범
건보공단 등 협업 도내 전역 확대
골든타임 사수 등 생명보호 기대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출범식이 14일 호텔 인터볼고 원주에서 열렸다. 이 사업은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경제진흥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협업해 추진하는 것으로 건보공단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전국 최초 프로젝트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강도태 이사장, 백순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홍경수 강원도경제진흥원장 등이 참석, 이번 진료지원 플랫폼 사업에 대해 높



14일 호텔 인터볼고 원주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출범식이 열렸다.

은 관심과 성공추진 의지를 보였다.

지난 2021년 5월 총사업비 88억원을 투입해 시작된 이 사업은 오는 2024년 12월까지 빅데이터 기반 진료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진료지원 플랫폼에서 의료정보활용에 동의한 개인이 의료기관에 내원하면 과거 진료기록을 의료진에게 제공, 중복진료를 막는 효과가 있다. 포의식

이 없는 응급환자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노약자의 의료 골든타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날 백순구 원장은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의료정보가 없어 중복진료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협업으로 효율 높은 수요 맞춤형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만큼 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주에서 시작해 춘천, 강릉, 속초 등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강수 시장은 "전국 최초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데이터 댐이 원주에서 열린다"며 "흘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해 의료진의 진료를 지원하고, 맞춤형 관리를 가능케 하는 이번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축사에서 "건보공단이 원주 혁신도시에 입주했다는 점이 강원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진료지원 플랫폼이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상철 bsc@kado.net

김기홍 강원도의회, 미래 진료 체계의 단초 '진료 지원 플랫폼' 출범 환영

박에스더 ess003@ekn.kr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오른쪽 두 번째)이 14일 원주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 지원 플랫폼'출범식에서 플랫폼 오픈 스위치 온 세러머니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은 14일 오전 10시 원주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 지원 플랫폼' 출범식에서 자신의 일화를 소개하며 이번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건강이 안 좋으신 아버지가 여행지에서 응급실을 갈 상황이 발생해 병원을 찾았다. 위급 상황이라 간단한 응급조치 후 의식이 없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사진 찍는 것부터 시작해 안 해도 되는 검사가 진행됐다며 비행기라도 타고 전에 아버지가 수술받았던 병원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오고 싶었다고 말하며 초조함에 피가 말랐던 그때의 답답함을 표현했다.

김 의원이 겪은 일은 새로운 병원을 찾았을 때 행해지는 불필요한 의료 행위이다. 앞으로 이런 불필요한 행위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출범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 지원 플랫폼'은 불필요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건강보험공단에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은 건보공단에서 운영 중인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 지원 서비스에 동의한 환자는 병원에 별도로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진료 지원 플랫폼에 참여하는 병원의 의료진이 과거 진료, 수술기록, 처방 내역과 건강검진 결과는 물론 생활 습관까지 한눈에 확인하고 진료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진료 지원 플랫폼을 통해 도민들은 흩어져 있는 본인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 받고, 의료진은 진료 시 다양한 의료 데이터와 라이프로그를 활용해 정밀하고 개인 맞춤형 진단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불편함을 줄이고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애타는 상황을 없애는 단초가 되는 자리이다. 미래 진료 체계가 우리 원주에서 시작한다는 게 자랑스럽다"며 "진료 지원 플랫폼을 잘 구축해 선도적인 원주, 특히 첨단 산업과 의료에 강한 지자체 이미지를 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

2022년 11월 14일 (월)
강원

KBS 춘천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 지원’ 시작...원주 시범운영



[앵커]

오늘(14일)부터 원주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 지원 플랫폼'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환자의 의료 정보를 병·의원이나 약국이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플랫폼'이란 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의사가 자신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자, 그동안 자신이 다녔던 진료와 처방 내역이 다 나옵니다.

어느 병원에서 언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혹시 알레르기나 약물 부작용은 없는지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빅데이터 원격 진료 시스템, 이른바, '진료 지원 플랫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이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건보공단은 환자의 의료 정보, 이른바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병원과 약국에선 이를 토대로 진료와 처방을 합니다.

[이종복/원주시 의사회장 : "진료 기록, 질병 상태, 그다음에 투약 기록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진료에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약물 중복 처방이나 오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응급처치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2022년 11월 14일 (월)
강원

[김익용/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교수 : "긴급하게 갔을 때도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 의료진들이 보다 적절하게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당분간 원주의 5개 병원에서만 시범 실시됩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내년 말까지 사업 대상지역을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도 800여 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 "국민 전체의 의료 정보를 이런 좋은 곳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건보공단도 강원도 원주에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초로."]

빅데이터 진료 지원 사업엔 2024년까지 국비와 강원도비 등 8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종호/영상편집:김진호

이현기

강원도민일보

레고랜드 쇼크 책임 공방, 여야 갈등 최고조

2022년 11월 15일 (화)

종합 01면

민주당 금융위기사태 조사단

"강원도 고의부도" 김진태 책임

국힘 한기호 의원 국회 토론회서

폐허 가능성·운영 문제점 제기

'레고랜드 쇼크 사태'의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춘천을 방문한 민주당 조사단은 "(강원도가) 고의로 부도를 낸 것이 아니냐"며 김진태 지사 책임론을 꺼내들자 강원도는 "재채기하다 다리가 무너지면 재채기 책임이나"고 반박, 전임자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단장 김종민) 소속 의원들은 이날 춘천 상중도 강원중도개발공사(GJC) 사무실을 현장방문, 송상익 대표 등을 만나 강원도의 '고의 부도' 가능성이 점검했다. 이후, 진상조사단은 도청으로 이동해 정광열 도경제부지사 등과 현안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단장은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시장과 금융시장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가까이는 강원도청과 도민들의 삶과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항이 되고 있다"며 "시장의 신뢰 문제가 흔들린 것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오기형 간사는 "만기에 지급하지 않으면 부도인데, 강원도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고의부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강원도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부지사는 "회생신청 검토시 BNK측과 협의를 했다"며 "강원도가 고의적으로 부도를 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강원 연구원과 국민의힘 한기호·이양수·유상범·노용호 의원 등과 공동 주최로 개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단장 김종민)이 14일 춘천 상중도 강원중도개발공사(GJC) 사무실을 방문, 송상익 GJC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강원도의 '고의 부도' 가능성 등 레고랜드 사태를 점검했다. 김정호



레고랜드 이슈의 본질은 무엇인가 포럼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태 도지사, 한기호, 이양수, 노용호 국회의원,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정호

최한 '레고랜드 이슈의 본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참석, "처음부터 일관되게 보증책임은 다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전임 도청의 빚을 갚아보려는 노력 중에 (논란이) 나타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기호 의원은 레고랜드 운영과 관련, "레고랜드는 금융 문제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와 레고랜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라며 "잘못하면 폐허가 될 수 있다"고 경고, 레고랜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이번 이슈는 정치 공방이 아닌 채권시장 본질에 맞춰야 한다"며 "재채기를 하던 와중에 다리가 무너졌다고 얘기하면, 재채기 때문에 다리가 무너졌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조사단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가 여당지사라고 해서 정부가 이를 비호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시장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승환·이설화 ▶ 관련기사 3면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15일 (화)

종합 03면

민주 “고의부도” 도 책임론 vs 국힘 “잘못된 선동” 정면반박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도청 방문
민주, 김 지사 간담회 불참 질타
국힘, 최문순 전 도정 정조준

강원도의 강원중도개발공사(GJC) 회생 신청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레고랜드 사태’를 촉발한 ‘고의부도’라고 규정, 도를 직격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잘못된 선동이 어떤 결과를 부추기는 지 레고랜드 사태가 상징적”이라고 반박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민주당

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진상조사단은 14일 강원도청을 찾아 정광열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등과 가진 면담에서 고의부도의혹부터 기한이익상실사유에 해당한다고 명문화 돼 있어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민 단장과 오기형 간사, 허영·이우영·위성근 국회의원, 김우영 도당위원장, 정재웅·박윤미·이승진·이지영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우영 (경기 고양시정) 의원은 “BNK가 기한이익상실로 판단하고 (채무)상환을 못하면 부도처리된다고 통보했다. 계약서에도 그런 조항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 대표는 “네”라며 “그럼에도 강원도에서는 일체 조치가 없었다”고 도의 책임을 강조했다.

허영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GJC에선 8월에 4개월분 선취이자를 냈다. 도는 이를 몰랐던 것처럼 한다”고 묻자 송 대표는 “이는 내년 1월말까지 CP를 연장하기 위한 절차다. 자기 들느리가 궁하니 그렇게 답한다”고 도를 직격했다.

이이진 도청 간담에서 김우영 도당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경제문제를 해소해선 안된다. 부지사나 국장이 파장

민주당 진상조사단	레고랜드 쇼크 사태 쟁점	강원도
“민기에 지금금 지급안하는게 부도인데 강원도 값을 능가했다.”	고의 부도	“회생 신청 검토시 BNK 투자증권 초과 협의 진행에 고의부도 아니다”
“BNK-중도개발공사측에 따르면 계약서상 회생 신청이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된다고 명문화 돼 있어”	계약서상 기한이익상실 사유	“계약서상에 회생 신청이 기한 이익상실 발생 사유라는 조항은 없어. 회생신청 계획 발표만으로 기한 이익상실 판단은 아쉬워”
“실패문제가 흔들린 것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으로 채권·금융시장 위기로 이어져”	채권·금융시장 위기	“시장의 우려 사실 아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보증책임 다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종민 단장은 “BNK측과 GJC에선 회생 신청이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사유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자, 박병주 비서실장은 “대출약정서 등 2개 계약서상엔 EOD 사유에 회생신청에 대한 것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계약서상에는 ‘해당 당사자가 파산신청 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때’라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회생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EOD사유가 아니다”고 했다.

김종민 단장은 “강원도와 정부가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주지 않는 한 김진태발 금융위기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는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레고랜드 이슈의 본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레고랜드 문제점은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 현재는 빚을 진 사람 따라, 갚는 사람 따로인 상황이 됐다”며 최문순 전 도정을 정조준했다.

이어 그는 “나 또한 범조인이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보증책임은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야권의 공세를 질타했다.

김 지사의 발언이 끝나자 도내 의원들도 잇따라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기호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은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레고랜드를 놓고,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

을 김 지사에게 덮어 씌우는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비판했고, 이양수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전임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불끄러운 소방수를 비난하는 격”이라고 했다.

노용호 (비례) 의원은 “이번 사태를 냄비 속 물에 비유하면 99%는 이미 엉뚱한 곳에서 끓기 시작한 것”이라고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최근 채권시장 경색, 레고랜드 회생신청 때문인가” 발제를 통해 “회생신청이 채권시장 자금경색을 심화시키는 하나의 계기는 됐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급증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에 있다”고 도정 책임론을 차단했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잘못된 선동이나 오해들이 어떤 결과를 부추기는 지는 레고랜드 사태가 상징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김진태 지사가 불참한 일을 두고 “책임자로서 깊이 인식해야 하는데 일부러 피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원주에서 열린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 지원 플랫폼 출범식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강원연구원 ‘레고랜드’ 토론회는 정치적 편향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강원연구원은 도지사의 방패막이용 정치탱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세훈·이설화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15일 (화)
종합 03면

도의회 보증채무 2050억원 심의 '결과 주목'

도, 자체재원·지역개발기금 편성
오늘 도의원 대상 심의예산 설명회

강원중도개발공사(GJC) 기업회생신청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강원도 보증채무 2050억원에 대한 강원도의회 심의가 주목된다.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는 오는 23일, 강원도 산업국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여기에 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 2050억원에 대한 예산이 포함돼있다.

도는 자체재원 1050억원,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 등으로 총 2050억원을 편성해놓은 상태다.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 기금 변경안 승인 역시 받아야 한다.

김기철 경제산업위원장은 “부채를 갚고자 하는 건 기정사실화됐다”며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인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강원도는 15일 오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 상환액 등 심의 예산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박기영(춘천) 도의원은 보도 자료를 내고 지난 10일 최문순 전 도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추가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설화 lofi@kado.net

江原日報

2022년 11월 15일 (화)

종합 01면

‘레고랜드 사태’ 놓고 여야 책임공방 격화

민주 진상조사단 GJC 등 방문
국민의힘 국회서 세미나 개최

채권시장을 뒤흔든 ‘레고랜드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김종민 의원을 단장으로 허영·오기형 의원 등이 포함된 민주당 김진태발(發)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은 이날 레고랜드 조성사업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와 강원도를

잇따라 방문해 GJC 회생신청 발표 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고의부도를 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오기형 의원은 “채무 지급 능력에 따라 (보증채무) 변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강원도의 고의부도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재명 당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대한민국 채권 금융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온 데 대해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정부는 확실하

게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진태 강원도정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역공에 나섰다.

강원연구원과 7명의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레고랜드 이슈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고의로 부도 냈다’는 민주당의 공격에 적극 방어하는 동시에 최문순 전임 도정에도 책임을 물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기호(춘

천-철원-화천-양구율)·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노용호(비례) 등 여당 강원도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이인선·서정숙·엄태영 의원 등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들은 레고랜드 사업 추진 과정을 짚으며 “최문순 전임 도정에 의해 문제가 생겼고, 이를 해결하려던 김진태 지사에게 화살이 향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서울=이하늘기자

江原日報

2022년 11월 15일 (화)

종합 02면

채무보증 당시 도의회 동의 안받아 ... ‘적법성’ 뇌관 되나

뉴스&이슈 道 레고랜드 채무 2,050억 추경 제출

속보=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대신 갚아야 할 2,050억원의 보증채무 상환 자금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본보 14일자 3면 보도)해 강원도의회에 제출했다.

자금시장 불안에 대한 책임론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채무 상환과 도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추경예산안의 의결권을 쥔 도의회는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번 사태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도의회가 추경 의결에 부담을 느끼는 지점은 2014년 당시 채무보증 이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지방

재정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만약 상환 이후 적법성이 결여된 보증이었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다.

2014년 GJC의 대출에 대한 강원도의 보증액이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증가했을 당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감사원 자료와 2015년 11월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통해 명백히 확인된다.

본보가 2015년 도의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당시 도의원들은 동의 없이 강원도가 2,050억원 대출의 보증을 선 것을 집중 질의한 바 있다.

2014년 지방재정법 위반 의혹 제기에 도의회 의결 부담도 “두 번의 도의회 동의거쳐... 사후에 포괄적동의 받은 상태”

이에 당시 담당 국장은 “강원도는 본협약이 해지되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자산회사의 매각 및 현물 출자한 부지를 환매해야 한다. (중략) 환매 부담에 대해 강원도의회 의 기존 동의안과 부합하기 때문에 다시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강원도가 GJC(당시 LL개발)에 출자한 토지 등을 다시 비싼 값에 사야 한다는 조항을 보증채무를 진다는 것으로 포괄적 해석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는 결국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된다. 감사원은 2014년 12월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은 채 채무보증 규모를 확대해 도의회 통제기능을 무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강원도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담당 직원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와는 별개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채무 상환에 앞서 도의회에 GJC 회생신청 동의안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현지점에서 GJC의 대출과

강원도의 보증이 불법인지 여부는 또 다른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도는 2020년 대출기관을 한국투자증권에서 BNK투자증권으로 변경했고 지난해에는 대출상환기한을 2023년 11월로 2년 유예하는 대신 금리를 3%대에서 5%대로 올리는 과정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았다.

2014년 당시에는 부당한 대출이 이뤄졌을 수 있으나 2020년과 지난해 두 번의 도의회 동의를 거처며 2,050억원의 대출을 도의회가 인지한 만큼 사후에 포괄적 동의를 받은 상태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도의회와)협의하고 설득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江原日報

2022년 11월 15일 (화)

종합 03면

與 “김 지사에 책임 전가”

강원연구원·여당 의원 포럼

전문가 “레고랜드발 위기는 오해”
의원들 “최문순 도정 잘못이 누적”
김 지사 “이자 갚으려 노력했던 것”

김진태 강원도정과 여당 국회의원들이 ‘레고랜드발(發) 자금경색 사태’를 두고 “최문순 전 도정의 잘못을 김 지사에게 덮어씌우고 있다”며 반격했다.

강원연구원과 여당 국회의원들의 공동 주최로 14일 오후 국회에서 ‘레고랜드 이슈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번 자금 경색 사태는 최문순 전임 도정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날 오정근(전 고려대교수) 한국금융ICT 융합학회 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일련의 현상은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경색이라기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금리 추이를 그래프로 제시하면서 “9월28일 김 지사의 회생신청 발표 후 금리는 안정적으로 움직였으나 10월13일 한국은행 금리 인상 후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여당 국회의원들도 방어 태세를 갖추고 최문순 전 도정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

원도 “진실은 지난 10여년간 이끈 최문순 지사의 잘못이 누적돼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고,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최문순 전임 도정에 의해 문제가 생겼음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김진태 지사에게 화살이 가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적 공세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용호(비례) 의원도 “냄비 속 물에 비유하자면 99도는 엉뚱한 곳에서 끓여 놓고, 회생신청 났겠다고 한 것을 온 금융권에서 위기를 말하면서 지금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능력에 맞는 지출을 하지는 게 강원도 재정 계획의 핵심”이라며 “레고랜드 역시 그런 정책의 일환에서 봐야 하는데 ‘정치화’라는 과편을 맞았다”고 말하면서 야권의 정치 공세를 막아섰다.

김진태 지사도 “정치적으로 전임 도지사가 한 것을 지우려고 강원도가 빚을 안 갚겠다고 나섰다”는 식의 온갖 소문이 돌고 있는데 잘못 짚었다”며 “보증채무 2,050억원 때문에 그동안 강원도가 부담하고 있는 이자만 699억원이다. 이걸 갚아 보려는 노력 중에 생긴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대출·이인선·서정숙·엄태영 의원 등 다수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공격에 맞서며 김진태 도정을 지지했다.

서울=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江原日報

2022년 11월 15일 (화)

종합 03면

野 “강원도發 고의부도”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GJC·道 찾아 책임 있는 사과 요구
강원도 대한 형사고발은 검토 안 해
道 “대출주관사 일방적 판단” 반박

더불어민주당과 강원도가 14일 레고랜드 발(發) 자금시장 불안에 대한 원인과 책임 등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김진태발(發)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은 이날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방문해 회생신청 발표 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고의부도’를 냈다며 책임 있는 사과 등을 요구했다. 반면 강원도는 대출주관사의 일방적인 기한이익상실 판단에 따른 부도 처리라고 반박했다.

이날 현안간담회에는 민주당 측에서는 김종민 조사단장, 오기형·위성곤·이용우·허영 국회의원, 김우영 도당위원장, 정재웅·박윤미·이승진·이지영 도의원, 강원도에서는 정광열 경제부지사와 윤인재 산업국장, 김용균 대변인, 박병주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오기형 의원은 이날 “강원도가 충분히 갚을 수 있고 추경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안 갚겠다고 선언했다”며 강원도가 고의부도를 낸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어 “GJC는 회생신청 시 기한이익상실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강원도는) 채권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생신청

을) 통지했다”며 강원도를 부도 원인 제공자로 지목했다.

이에 정광열 부지사는 “고의부도를 통해 강원도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회생신청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BNK투자증권과 만나 상의를 했다. 채무불이행 계획이 없다고 공문으로도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또 강원도는 GJC와 아이원제일차가 맺은 대출약정서와 강원도, GJC, 아이원제일차가 맺은 토지매매합의서를 모두 검토한 결과 회생신청 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김종민 단장은 이에 대해 “계약당사자인 BNK, 중도개발공사가 회생신청이 기한이익발생 사유라는데 강원도가 아니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된다. 만약 잘못 알고 있다면 엄청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시장의 신뢰 회복과 함께 사태가 더는 확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과 시장에 대한 (김진태 지사의) 사과가 없는 것이 아쉽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향후 금융 당국에 대한 추가 조사 후 정책대안 등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강원도에 대한 형사고발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강원도는 2014년부터 GJC의 계약일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2014년부터 대출계약이 여러 차례 변경된 만큼 강원도와 GJC가 갖고 있는 계약서가 서로 다른 버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기영기자

江原日報

2022년 11월 15일 (화)

지역 10면

제2호 반다비 체육센터 신복읍에 건립

문체부 공모 선정 기금 40억 확보 ... 총 100억원 투입
2026년 1월 개관 목표 ... 2천㎡ 규모 각종 운동시설

【춘천】춘천시와 춘천지역 도의원, 시의원, 주민들의 공조가 신복 반다비 체육센터 국비 확보의 결실로 이어졌다.

춘천시는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기금 40

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따라 예산 100억원(기금 40억원, 시비 60억원)을 투입해 신복읍 읍문리 935-67번지 인근 부지에 2026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신복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신복 반다비 체육센터는 사업비 242

억원을 투입해 우두동 일대에 건립 중인 제1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에 이어 두번째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2,000㎡ 규모다. 체육관, 수중운동실, 탈의실, 샤워실, 헬스장, GX룸,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신복읍 읍문리 일원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현지 실사에는 박찬홍 강원도의원, 김보건·박제철·배

숙경·정경옥 춘천시의원, 김준해 신복읍 이장단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김윤철 시체육과장은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도 함께 사용하는 체육시설은 물론 복합적인 문화체육시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1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전체 면적 7,118㎡, 건축 면적 3,482㎡로 내년 7월 준공, 내년 9~10월 중 개관 예정이다. 장현정기자

江原日報

2022년 11월 15일 (화)
지역 11면



둔내면 두원1리 경로회관 준공식 횡성군 둔내면 두원1리 마을 경로회관 준공식이 14일 두원리 874 현지에서 김명기 군수, 김영숙 군의장, 표한상 부의장, 최규만 도의원, 유병화 군의원, 전성택 횡성군노인회장,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15일 (화)
인물동정 16면



강정호 강
원도의원
(속초)은
15일 오전
10시 대포

농공단지에서 악취 문
제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는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15일 (화)
지역 13면



평창군 대관령면변영회와 대관령두메길이 주관한 '제1회 대관령 포럼'이 14일 오후 용평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지역의 각급 기관 단체장, 대관령과 인접한 강릉시와 진부면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산악관광·농업 6차산업화 방안 모색

첫번째 대관령포럼서 의견 교환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대응도

평창 대관령면변영회와 대관령두메길이 주최한 '제1회 대관령 포럼'이 14일 오후 용평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심재국 군수, 김성기 군의회 부의장과 군의원, 최종수·지광천 도의원, 최기용 도 문화관광국장, 신달순 용평리조트 대표와 지역의 각급 기관

단체장, 대관령과 인접한 강릉시와 진부면지역의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Again 2018, 글로벌 산악관광과 스포츠,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김주원 상지대 교수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의 대관령면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봉래 대관령면변영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대관령면이 명실상부한 산악관광도시, 고소득농업도시로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를 되길 바라며 주민과 함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현태

2022 태백시새마을회 우수마을공동체 경진대회 개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태백시로고 (사진제공=태백시)

[아시아뉴스통신=김종학 기자] 2022 태백시새마을회 우수마을공동체 경진대회가 13일 상장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한동구 태백부시장, 문관현 도의원, 심창보 시의원, 정연태 시의원, 홍지영 시의원, 박정숙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진수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장, 손재호 태백시새마을회장, 8개동 새마을협의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올 한해 진행하였던 마을공동체 우수사업을 시상하고 격려하며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운동의 참뜻을 새겼다.

1부 행사에서는 우수마을 만들기 경과보고와 우수사업 시상으로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2부에서는 회원 화합 행사로 체육대회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펼쳐졌다.

한동구 태백부시장은 “지역발전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따뜻한 태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새마을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마을공동체 운동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회원 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15일 (화)
지역 09면

강춘·가평 관광특구 광역단체 심의서 발목

강원도, 안내소 설치 요구
경기도, 도면 재작성 지적
시 “이달 내 서류 재 제출”

속보=남산면 강춘부터 남이섬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개발 사업(본지 2021년 12월 16일자 11면 등)이 추진되는 가운데 강원도가 개발 내용 보완을 요청하면서 관광특구 지정에 제동이 걸렸다.

14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지난해 12월 강원도에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 심사 결과 강춘리 일대 관광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는 등

의 내용이 담긴 보완 요청이 내려졌다. 가평군 역시 경기도에 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나 제출한 도면을 지목별로 구분해 다시 작성하라는 내용 등으로 보완 요청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경기도 가평군과 함께 남이섬부터 강춘구곡포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사업을 공동으로 준비해오고 있다. 서로 다른 광역단체가 관광특구 지정을 공동으로 준비하는 사례는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차 없는 거리 조성, 푸드트럭 허용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춘천시는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강춘 일원을 다시 활성화하고 남이섬에 집중된 관광객들을 강춘과 도심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정대로라면 도차원의 용역 이후 올 상반기쯤 관광특구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됐어야 하지만 보완 요청이 내려지면서 연내 지정 고시여부는 요원하다. 시는 보완 내용과 관련, 구강춘역 인근에 위치한 건물을 이용해 관광안내소부터 이달부터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안내소 운영부터 시작해 이달 안으로 도에 다시 보완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강춘리 인근에 조성하려던 BMX 자전거 경기장마저 사실상 무

산되면서 강춘리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강춘리 247-12번지 일대에 BMX 경기장 겸 연습장을 비롯해 주차장, 창고,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국제경기까지 가능한 경기장 규모를 조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강원도투자심사위원회는 사유지 일대 매입에만 23억원이 소요되는 점을 지적, 다른 부지를 모색할 것을 요구하면서 재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유지 또는 하천 부지를 모색해봤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다른 방안을 알아보고 노력했지만 조성할 수 있는 땅이 없는 상황”이라며 “무산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승은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15일 (화)
인물 22면



강원역사문화진흥원 설립·유치 추진위원회(위원장 함종빈 전 강릉교육장)는 14일 울곡 연구원에서 강원역사문화진흥원 설립·유치 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출자·출연 기관 진행 방안 및 전략 등을 논의했다.

“강릉에 강원역사문화진흥원 설립 도 차원 추진 필요”

추진위 전체회의 진행방안 등 논의

강원권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종합적 수집·보존·연구 업무에 거점 역할을 할 ‘강원역사문화진흥원(가칭)’ 강릉 설립과 관련 강원도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원역사문화진흥원 설립·유치 추진위원회(위원장 함종빈 전 강릉교육장)는 14일 울곡연구원에서 강원역사문화진흥원 설립·유치 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출자·출연 기관 진행 방안 및 전략 등을 논의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진흥원 설립은 강릉시에서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

고 있지만, 강원도의 의지가 미흡해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추진위 차원에서 건의문을 작성해 도지사 면담을 갖는 등 적극적인 추진 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 측은 오는 19일 충남 논산의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답사할 계획이다. 한편 추진위는 권성동 국회의원,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최명희 전 강릉시장, 정호돈·염돈호 전 강릉문화원장, 최종구 신임 울곡연구원 이사장 등 지역 원로 고문단과 도·시의원을 비롯한 강릉지역 오피니언리더 150명이 참여하는 자문·추진위원단으로 구성됐다.

이연제

江原日報

2022년 11월 15일 (화)

지역 10면

도청 신청사 유치 지역간 경쟁 심화

24일 부지선정위 4차 회의

【춘천】속보=올해 결정될 강원도청 신청사 유치를 위한 지역간 경쟁(본보 지난 9월1일자 10면 보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근화동·소양동·조운동·약사명동 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사)서부시장운영위원회, 요선동 상가연합회, 이편한 아파트 입주대표위원회 등은 14일부터 1인 피켓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중앙초교 앞, 구 춘천여고 앞, 소양로현대아파트 삼거리, 운교로타리, 몸짓극장, 남부시장, 강원도청 앞, 근화동 일대, 서부시장 앞 칠층석탑 사거리, 요선동,

한국은행 앞 등에서 ‘도청사는 캠프페이지로’, ‘소양·근화·명동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오는 24일 열리는 강원도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위원회 4차 회의까지 피켓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근화동·소양동·효자1,3동·교동·조운동·약사명동이 지역구인 이선영 시의원은 지난 8월부터 중앙로터리에서 ‘도청사는 캠프페이지로’라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재 도청사 유치에 나선 지역은 소양·근화·명동, 신사우동, 동면, 동내면 등 총 4곳에 달하고 있다. 장현정기자 hyun@

江原日報

2022년 11월 15일 (화)

종합 01면

기존 집 안 팔리고 ... 세입자 못 구하고 ... 잔금대출에 막혀

강원 아파트 입주율 전국 최하위권

67.5%로 제주 이어 2번째
가격도 수천만원씩 하락
침체 가속 부동산시장 비상

강원도 내 아파트 입주율이 불과 7개월 사이 15.5%나 떨어지면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더욱이 주택사업 경기전망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4일 발표한 '10월 아파트 입주율 및 전망'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입주율은 67.5%로 조사됐다. 올 4월 83%를 기록, 전국 평균 82.3%를 웃돌 정도로 강세였던 입주율이 불과 한 달 뒤인 5월 77.5%로 뚝 떨어지면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9월 76.2%에 비해선 8.7%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따라 10월 도내 아파트 입주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66.0%)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전국 평균 72.5%에 비해서도 5.0%포인트 밑도는 수준이다.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37.5%)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세입자 미확보'(32.1%), '잔금 대출 미확보'(26.8%)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

템(<http://rt.molit.go.kr/>)에 따르면 춘천 온의동 A아파트 84㎡형의 경우 올 9월에는 5억500만~5억4,000만에 거래됐지만 이달 들어 5억원 이하로 하락했다. 올 8월 4억6,000만~4억9,000만원 사이에 거래됐던 원주 무실동 B아파트 101㎡형의 경우도 9월 들어서는 4억4,500만원대에 머물렀다.

문제는 향후 전망도 어둡다는 데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에 따르면 도내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50.0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75.0) 대비 25.0포인트, 지난달(52.9) 대비 2.9포인트 각각 떨어진 수치다. 올 초부터 본격화된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한

건설 원가 상승과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주택사업자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기대수익이 감소하고 위험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입주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 완화 및 무주택자 대출 지원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휘기자

G1방송

2022년 11월 14일 (월)
강원

환경오염·악취발생 등 축산악취 민원 증가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도내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 환경오염과 악취발생 등의 축산악취 민원이 3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강원도 축산악취 민원은 301건으로, 지난 2018년 154건보다 약 2배 가량 늘었습니다.

지난해 도내 소 사육두수는 24만 마리, 돼지는 52만 마리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뉴스

2022년 11월 14일 (월)
전국

김진태 강원도지사, 아동폭력없는 세상을 만들어요!

백상현 기자

아동폭력근절 'END Violence' 릴레이 캠페인 동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아동폭력근절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강원=국제뉴스) 백상현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END Violence' 캠페인에 지난 11일 동참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김 지사가 동참한 아동폭력근절 캠페인은 아동과 청소년을 향한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외교부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계적인 인식개선 활동으로 지난 7월부터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캠페인은 '폭력을 멈추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관심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단 한 명의 아이들도 빠짐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편, 김진태 지사는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과 김현영 강원대학교총장을 추천했다.

민영 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백상현 기자 na78hjm@gmail.com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15일 (화)
오피니언 18면



요즘에

조계근 강원미래전략연구원장·
전 상지대석좌교수

부채축소 노력을 정치희생양 아닌 문제해결 기회로

최근의 어려운 국내의 경제 상황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무한정 신용증가로 인한 물가급등, 이를 해결하려는 급격한 이자율 인상이 원인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위기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신용증가,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으로 인해 관련 기관의 적자 누적 등이 물가 상승으로 파급되자 한국은행이 이자율을 인상한 데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레고랜드 부도 사태는 강원도 지사가 레고랜드를 운영하는 중도개발공사의 부채 2050억원에 대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자 채권주관사가 부도 처리한 것이 강원도 채무불이행으로 호도되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채권주관사의 처사를 국가 전체의 채권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정치권과 언론이 무분별하게 이슈로 부각시켜 정쟁화하는 것은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자 침소봉대의 전형이라 생각한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발생하고

최근 레고랜드 사태

도민 세금 절약·신속 상환

사업 정상화 하려는 노력

강원 투자 기업 영향 없어야

있는 DB생명 등 금융권의 콜업선 미행사 사태는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국제 금융시장의 미래 불확실성 증가가 국내 금융시장을 불안정한 환경으로 만들었고, 한국은행 금리인상 여파가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사실 레고랜드에 대한 원천적인 책임은 전임 지사에게 있다고 봐야지 현 지사 책임론은 어불성설이다. 현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도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추진한 정책이 강원도의 재정개혁이다. 그 일환으로 전임자가 무분별하게 추진한 레고랜드 사업의 부채를 축소하려고 한 것 외엔 전되고 오해가 축

적된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은 중도개발사업의 완성도 제고와 경영정상화를 통해 도민들의 세금을 절약하고 채무를 신속히 상환해 사업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지난 9월부터 각종 채권금리가 상승을 시작한 시점에 중도개발공사 채무에 대해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전임 지사처럼 이자비용만 예산에 반영하고 채권만 기까지 기다렸으면, 레고랜드와 중도개발공사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됐을 것인데, 너무 서두른 것이 화근이 됐다.

현재와 같은 금융시장의 경색국면의 주범을 레고랜드로 몰고 가는 것은 규모 면이나 내용 면에서 이해할 수 없다. 레고랜드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것은 정치적인 희생양을 찾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강원도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의 공기이자 대변인인 언론도 잘못된 정치 논리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대안을 마련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거듭나야 한다. 현재 급증하는 인플레이션과 금융경색의 책임은 과거 정권 5년간 방만한 재정지출과 돈 풀기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 한 정책에 근인이다. 새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공기업 정상화와 채무관리에 적극 나설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도 축소하는 조치를 한바 있다.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강원도는 레고랜드 부실문제와 채무부보증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레고랜드 경영정상화 및 법적 조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도청 부채와 공기업 부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미래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 건전성 제고 문제를 종합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15일 (화)

사설/칼럼 19면

내년 예산안 복합적 위기 대응 누수없어야

-도의회 8조원대 예산 알뜰히 쓰이도록 치밀한 검토 필요

강원도가 내년 당초예산안으로 8조 8620억원을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선8기 김진태 도정의 첫 당초예산안 방향은 △경제안정 △건설재정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3대 방향을 담았다는 설명입니다. 육아기본수당을 5세까지 확대하고 참전·보훈명예수당 등 맞춤형 복지예산이 2조 5209억원으로 10대 분야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엔 올해보다 4860억원이 늘어났지만 민생과 직접 관련 없는 사업비가 적지 않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조성 600억원, 채무상환 558억원, 특별자치도 출범 40억원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한 공기업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채무보증 이행예산 2050억원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도 자체재원 105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을 조달하게 되면 서 다른 분야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당장 특별자치도 출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동시에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피해를 보고 재기해야 할 도민을 돕는 민생에 누수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있습니다. 타시도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초에서 실물 경제

악화에 따른 취약층 민생과 소상공인 경제가 예산안 편성의 주요 기초가 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각계각층의 일자리 및 소상공인 등 취약층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자보전 69억원을 비롯 농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확보 및 청년층 일자리 및 문화예술 활동에 예산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도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가 축소시킨 '노인 일자리'와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을 편성했고, 지역화폐 등 민생위기 대응 예산 2403억원 확보를 결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끼는 등 강력한 재정혁신을 이루겠다”며 재정혁신 분야에 1조 253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부채를 갚는 건 전제 정도 중요하지만 재정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내년엔 경제가 더 나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에 강원도의회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알뜰하게 쓰이도록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게 따져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전통시장은 삶의 터전이
자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서
민의 삶과 애환 그리고 역사
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
다. 하지만 이러한 평범한
일상도 안전이 전제됐을 때
가능한 일이다.

강원포럼

이 상천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22년 11월 15일 (화)

오피니언 19면

이는 상인 스스로 공제기금
을 조성하고 사업 운영비용
을 정부에서 지원해 저가의
보장성 공제상품으로 운영
하는 방식이다. 전통시장 특
성을 반영해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2년)간 전국 전통시장
의 화재 발생 건수는 총 254건으로 피
해액은 1,67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50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누
전, 합선 등의 전기적 요인’이 46%
(117건)로 가장 많았고, 계절별로는 난
방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 화재
발생률이 38%로
가장 높았다.

전통시장은 유동
인구가 많고 소규모

개별 점포가 밀집해 항상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건물이 노후하고 복
잡한 미로식 통로의 구조적인 한계와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전기·가스시설
과 각종 조리기구, 온열기구 사용으로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진압하고 사후 관리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전에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도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빈
번히 발생하고 있다. 올 7월 대구 성
서용산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살펴

보면, 인적이 드문 늦은 밤 11시경에
발생한 화재로 자칫 큰불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다. 그러나 화재
예방을 위해 설치한 화재 알람시설에
의해 관할 소방서로 통보되면서 16분
만에 신속하게 초동 진압,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화재 발생 이후에도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돼 있어 손
실액 대부분을 보상받았다.

전통시장 화재 피해 최소화하려면

전통시장 화재 알람시설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중
소벤처기업부가 2017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점포당 80만원 한도에서 감
지기, CCTV, 수신기 등의 구축을 지
원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연기, 열,
불꽃 등 발화요인을 감지해 관할 소방
서로 즉시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전통
시장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
시장 상인의 생업 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2017년부터
도입한 ‘전통시장 화재공제’도 있다.

가격이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하다.
특히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을 전액
보장하고 7일 이내 가입금액 내에서
피해액을 전액 구제받을 수 있는 빠른
보상 시스템이 장점이다. 이처럼 전통
시장에 화재 알람시설을 설치하고 화
재공제를 가입해 미리 대비한다면 예
기치 못한 화재 발생 시에도 빠른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는 시설 현대
화와 피해구제 제도
등도 물론 필요하지

만 시장 상인들 스스로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전기·가
스 등 정기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
에 차단하고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
입로 확보를 위해 통행로에 상품 진열
을 줄이고 정기적인 소방안전 교육을
통해 초기 진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통시장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
생할 수 있는 인재다. 불이 내려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상인은
안전이 최고의 투자라는 생각으로 철
저한 화재 예방에 나서야 한다. 올해
는 전통시장이 뜨거운 화재 사고 없이
훈훈한 겨울을 나기를 기대한다.

/ 내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

#1 올 10월 초 김군은 친구들과 자신의 방에서 놀던 중 방을 치우라는 외조모의 말에도 방 상태가 정리되지 않자 외조부가 방으로 들어와 “그렇게 하면 누가 널 좋아하겠냐” 등의 폭언을 하며 뺨을 때렸다. 김군은 무서워서 방문을 잠갔으나 망치로 문을 부수겠다고 위협했고 김군이 직접 112로 신고했다.



#2 강기훈(가명·41) 씨는 10세 딸과 7세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 아이들에게 “앞으로 전화를 안 받으면 (다른 곳에) 팔아버리겠다”며 나무 회초리로 머리와 엉덩이를 때렸다. 이후 친모와 아이들을 안방으로 불러 “이렇게 살 거면 다 같이 죽자”며 칼로 위협, 가족센터 관계자가 이를 발견했다.

학대와 방치 ... 고통받는 아동 다시 증가

강원도 내 아동학대가 다시 증가 추세에 놓였다.

오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집계한 강원도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2019년 1,968건에서 2020년 1,496건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1,569건이 접수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춘천시의 경우 2022년 10월까지 모두 197건의 신고가 접수돼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182건)를 이미

도내 신고 건수 지난해 증가세 돌아서 올해도 대폭 늘 전망
재등교 학대흔적 발견 등 원인 ... “주변의 따뜻한 관심 절실”

훌쩍 뛰어넘었다. 도내 타 지역의 상황도 다르지 않아 도내 아동학대 신고는 올 한 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증가의 원인을 코로나19 이후 아동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아동학대의 흔적이 발견되는 비중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학교나 가정에서 생애주기에 맞는 아동 권리와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아동 스스로가 학대임을 인지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신고 증가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정동환 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일도, 위험에 빠진 아동을 도와주는 일도 아이들이 안전한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남의 일이라 지나치지 말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한 도내 5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6일 강원음악창작소 아나바레에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관심 제고에 나선다.

김민희기자 minimi@kwnews.co.kr